



2023.5.30.

국회미래연구원 | 연차보고서

2022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3.5.30.

국회미래연구원 | 연차보고서

2022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년도 연차보고서

발간사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2021년에 이어 6대 아젠더(불평등, 기후위기, 혁신성장, 저출생·고령화, 국민통합, 복지체제) 중심의 국가중장기발전전략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에 기관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전 연구기획을 강화하였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국회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성과확산 활동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의회외교 전략 및 의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국제전략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입법부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회의 외교적 역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미래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미래선호와 행복 등에 관한 조사·분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이후 정책 설계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자료원에 데이터를 기탁하여 일반인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확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개별 보고서를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모든 보고서는 홈페이지(www.nafi.re.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이 국가 중장기적 관점의 아젠더 중심 연구와 국회미래연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김현곤

2022년도 연차보고서

목차

I

연구사업

1. 2022년 연구사업 특징	06
2. 2022년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08
3. 2022년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45
(1) 국가미래전략 Insight	45
(2) 국제전략 Foresight	57
(3) Futures Brief	61
4. 2023년 연구사업 방향	66
(1) 연구사업 방향	66
(2) 연구과제 목록	67

II

주요 활동

1. 주요행사	70
2. 미래기고	75
3. 언론보도	79
4. 뉴스레터	80

부록

1. 설립목적	84
2. 주요연혁	84
3. 조직 및 인원	85
4. 비전, 목표, 전략추진체계	86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사업

1. 2022년 연구사업 특징
2. 2022년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3. 2022년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 (1) 국가미래전략 Insight
 - (2) 국제전략 Foresight
 - (3) Futures Brief
4. 2023년 연구사업 방향
 - (1) 연구사업 방향
 - (2) 연구과제 목록





1. 2022년 연구사업 특징

▣ 추진방향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에 기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전 연구기획 강화
- 연구수행과정에 국회 내외부 전문가 참여 및 전문분야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확산 활동 확대

▣ 주요 추진사항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전망 보고서 발간
- 2021년에 이어 6대 아젠더(혁신성장, 저출생, 고령화, 복지체제, 불평등, 기후변화, 국민통합)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국제질서를 종합연구하고 의회외교를 지원하는 국제전략연구센터 신설

▣ 2022년 연구실적 목록

사업명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박성원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박상훈
		혁신성장을 위한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 전략
		성문주
		전환기 청년의 미래
		이상직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재편 연구
		민보경
		국민 주거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중장기전략
		이선화
연구기반	국제전략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정 훈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순환경제 미래영향 및 국가전략
		김은아
	미래이슈 탐색연구	국민통합을 위한 의회정치 연구
		박현석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중장기 국제전략
		차정미
		한국인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
		허종호
연구기반	미래이슈 탐색연구	미래정책과 국민의 선호 연구
		박성원
	미래이슈 탐색연구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민보경
연구기반	미래이슈 탐색연구	녹색전환과 환경갈등의 미래 탐색연구
		김은아
연구기반	미래이슈 탐색연구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김태경

사업명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연구기반	미래이슈 탐색연구	대전환 시대의 지역발전 정책 이슈	민보경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21대 하반기 국회의원 보좌진의 미래의제 인식 조사	박현석
		돌봄 관계의 미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이상직
		고령자 고용·노동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정혜윤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개발도상국의 미래 연구 :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국제질서의 미래	차정미
성과확산	성과확산	연구기획 및 지원	유희수
		연구 성과확산	김병수

2. 2022년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연구책임자 박성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전망한다. 규범적 미래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도출한 선호미래상,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이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 성장은 지양, 개인이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강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한다. '성숙사회'를 실현할 6대 분야의 미래로 우리사회가 지향할 '선호미래', 대응할 '회피미래',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맞이할 미래'를 제시했다.

□ 주요내용 및 정책대안·시사점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중장기전략으로 '기술혁신, 규범 주도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남북한 이분법적 단위가 아니라 다수의 하위 정치단위들의(예, 도) 연합적 질서'와 '지역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 제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연구책임자 박상훈

□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 과정에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간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환적 국가 가치로 성숙사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때 제시된 성숙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국정 철학과 비전은 물론 학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고찰했고, 이어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숙사회 또는 성장의 이면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정립된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선 주요 정당의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와 성숙사회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법안 발의를 통해 법·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숙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비전 2037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4대 핵심 목표 및 12대 아젠더를 기반으로 120대 국정 과제를 맵핑하고, 이를 성숙사회 개념화 요소인 공정과 정의, 관계의 평등, 자연의 권리, 성장과 전환적 가치의 균형적 추구, 역량 및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기능 선택 보장의 관점으로 공통된 지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성숙사회 구현 관점에서 필요한 논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의제는 일부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고, 일부는 담론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의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논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 국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정치이론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칭) 미래 협치 특위’를 설치하여 국회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의제 및 국정기획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성숙사회의 비전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미래의제를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
22-03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성문주

□ 연구배경 및 목적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에서 선도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조직을 구성하는 재직자와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지원에 초점을 두고 혁신역량 향상과 관련된 학습지원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시도, 경험, 실패, 성찰을 통해 학습자가 특정 맥락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학습을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의 특성으로 보고,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강조되는 학습 유형으로 ‘무형식학습’, ‘실수로부터 학습’, ‘자기주도학습’, ‘경험학습’, ‘협력학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원리/전략으로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노출’, ‘새로운 지식과 발견에 대한 개방적 태도 형성’, ‘실제 상황에서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유로운 탐색 촉진’, ‘기존 지식의 재해석 및 재구조화 촉진’, ‘문제해결의 전과정을 주도한 경험 제공’, ‘도전을 멈추지 않는 끈기 형성’,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지원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Amabile(1988)의 ‘조직에서의 창의성 구성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지표체계를 환경 영역 및 개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환경은 제도와 문화의 세부영역으로, 개인은 인지역량과 비인지역량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초안 개발은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기존에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수집·관리중인 통계자료 및 지표자료,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자료 등을 탐색하여 연결(mapping)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의 타당화는 국내외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 타당화 과정에서 학습유형, 지표체계, 개별지표의 수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재직자 및 대학생 대상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최종안)는 4차산업 관련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고등교육, 지역혁신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표 활용 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인의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 정책 등 종합적·다면적 접근을 제안하며, 적용 맥락과의 적합성 및 지표 실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방식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보고서
22-04

선도형 혁신체제 도입과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연구책임자 여영준

□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표준화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데 특화된 혁신체제를 형성하여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추격형 성장 단계에서 유효했던 기술학습과 혁신역량을 가진 궁극적 주체는 바로 사람이었다. 시대에 따라, 혁신체제 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상은 달라졌고,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역할과 비전 역시 변모해왔다. 그리고 현 시점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산업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고도화되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르러, 우리만의 혁신성장 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기존 발전모델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개개인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을 이뤄내고, 학습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한 경력계획 설계와 개인 생애 전주기적 학습활동 참여를 통한 노동시장 내 적응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개인 학습역량 지원에 있어서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거시적 차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성장에 있어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성장 정체 현상을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 실패 문제로 바라보고, 정량적이고 정성적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전환 실패 문제를 일으킨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①직업능력개발, ②일학습병행, ③고등교육기관, ④중장년층, ⑤지역사회 등)별 정책혁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신기술 및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역량 형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창조적 학습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 목적의 정책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학습역량 전환 및 경제체제 내 혁신주체들의 학습역량 제고는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성장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더불어, 이 같은 학습역량 제고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혁신체제 패러다임 전환기 학습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주요 정책대안 논의가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체계적, 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둔 중장기 비전 및 전략도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다양한 학습활동 진작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보고서
22-05

전환기 청년의 미래

연구책임자 이상직

□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 시도다. 오늘날 한국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는 한편, 청년의 삶의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와 제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역할과 인식을 함께 보고자 했다. 이 작업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20-30대라는 연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나’를 역사적으로, 비교사회적으로 비교했다.

□ 주요내용

2장은 오늘날 청년 문제가 등장한 맥락을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과 변화라는 맥락에 자리매김한다. 3장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청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추적한다. 4장은 2000년대 이래 청년 담론 구조를 포착한다. 5장은 라이프코스의 일반적인 변화가 한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OECD 국가 사례 비교로 확인한다. 6장은 OECD 국가를 사례로 청년 실업의 구조를 비교한다. 7장은 성인 이행기에 7개 국가의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한다. 8장은 청년의 인구 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9장과 10장은 청년층의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등 인식의 측면을 검토한다. 11장은 청년 정책의 현황을 검토한다. 12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를 과도기적 단계로, 미숙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청년기의 생활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용없는 저성장·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연구

연구책임자 민보경, 이채정

□ 연구배경 및 목적

고용 없는 저성장의 지속과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해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과 초고령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제 설계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1990년부터 최근까지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복지체제 변화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사회지출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정부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지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기존보다 세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령자 대상 사회지출 현금급여 비중은 높아지고 가족대상 정책 현물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다.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체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사회보장기여금 평균 비중이 20-30%를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소득세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핀란드의 복지재원은 국세, 지방세, 고용기금, 연금 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복지 재원 구성은 사회보장기여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일반사회 공헌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의 주요 정책 분야를 검토한 결과, 먼저 노동시장은 고용없는 저성장 하에서 소득보장과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유형별 고용률 효과를 고려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책조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소득보장 정책 관련해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상자의 증가로 소득보장에 대한 지속적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신종 감염병의 출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주거정책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주거급여의 확대, 소득과 자산 수준 수준에 맞는 주거지원, 노후주택과 빈집의 활용과 개선이 필요하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복지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최근의 시도 역시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다. 부문별 정책을 넘어서 체제 전환은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을 넘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연구보고서
22-07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연구책임자 정훈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에너지원으로, 탈석탄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쇠퇴와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 경제에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갈등을 조명하고,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규명하였다. 도출된 갈등 이슈에 대해 사회적 영향과 갈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주요 갈등 이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이슈별 현황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주요 피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FGI 방식을 병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탈석탄 입법 과정과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순조로운 탈석탄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 사례와 국내 탈석탄 과정의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 ① 사회적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수립
- ② 탈석탄 로드맵 구축을 통해 정책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 ③ 탈석탄 정책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비용 부담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 ④ 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사회적 대화 추진
- ⑤ 탈석탄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제도 체계 정비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연구

연구책임자 정훈

□ 연구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라고 할 수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경로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대기오염과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에 앞서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이에 따른 석탄발전소 퇴출 경로 분석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별 2050년까지의 전력믹스와 석탄발전 감축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비용·편익 개념 및 사례조사를 통해 발전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과, CGE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이행 경로의 사회적 비용·편익 및 좌초자산, 고용영향, 경제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 프레임워크는 분석 방법론과 활용 데이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분석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①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 구체화 및 탈석탄 로드맵 구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행의 확실성 제고
- ② 탄소중립 정책 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 분석 강화
- ③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④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

연구보고서
22-09

순환경제 산업 중장기 시나리오와 미래영향

연구책임자 김은아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특정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순환경제 전환 부문에서 국내외 공통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현황과 미래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였다.

□ 주요내용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에 따르는 사회·경제·환경적인 파급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요 산업을 도출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순환경제 전략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6개 주요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순환경제 전환 부문에서 국내외 공통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플라스틱 전과정 물질흐름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였으며,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거나 개발 단계인 플라스틱 물질순환 기술을 적용하여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두가지 BAU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과 비교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상기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국내 순환경제 전환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와 기회 요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투자로 인한 주요 산업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된 시사점은 제2권 순환경제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로 연결되며, 국내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순환경제 미래산업 전략

연구책임자 김은아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가 미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경제 기술 개발방향과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순환경제 기술 개발현황과 산업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 주요내용

물질(원료 등) 자원의 사용과 폐기가 집중된 6개 주요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 관련 취약점과 기회영역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❶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기술 전략을 도출하고, ❷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전략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기술 전략 부문에서는 국내외 순환경제 기술 개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영역을 발굴하고, 관련 미래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미래기술 개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산업 영역 발굴에 따라 전체 산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반영한 산업연관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산업별 정책 전략 및 입법과제 부문에서는 국내외 순환경제 관련 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순환경제 관련 현행법과 현재 입법 준비단계에 있는 법률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순환경제 전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제도와 법률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순환경제 미래산업 성장에 핵심요소인 기업투자 전반에 관한 전략과 관련 입법과제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국내 순환경제 취약요소 및 기회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관점에서 순환경제 정책이 강화되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중심의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및 일자리에 관한 부처에서 순환경제 정책이 주류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점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범위 조정, 재생원료 품질인증, 에코디자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 및 소비 단계의 물질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22-11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 형성·구조·변화

연구책임자 이상직

□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노동건강 문제가 전환기적 맥락에 놓여 있다는 판단 하에 노동건강문제가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맥락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역사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다. 이 연구는 노동건강 문제가 규정되어 온 맥락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노동건강 문제가 다루어져 온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노동건강에 관한 시각을 공학, 법률, 보건의로 등의 관점에서 정치·사회학적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주요내용

보고서는 크게 6개 부 18개 장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 노동건강 문제의 현황을 살펴본다(1-3장). 2부에서는 노동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화되는 맥락과 과정을 살펴본다(4-6장). 3부에서는 노동건강문제의 당사자이자 노동건강 관련 정치 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조직적 활동을 살펴본다(7-9장). 4부는 노동건강 관련 법과 행정을 다룬다(10-12장). 5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13-14장). 6부는 노동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관점과 방법론을 모색한다(15-18장).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노동건강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노동건강의 문제가 결국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의 주요 장들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를, 나아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종합적인 시각과 정치 과정에 주목하는 관점은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을 한층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회) 정치의 역할을 고민할 때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Future of the World Order in 2050 - Probable vs Preferred

연구책임자 차정미

□ 연구배경 및 목적

강대국 경쟁의 심화, 코로나19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등 다양한 복합적 도전들이 부상하면서, 탈냉전 이후 서구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근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탈냉전 질서의 종언이라는 선언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미래 부상할 국제질서의 양상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전개해 가고 있다. 본 세계 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질서 변화의 주요한 흐름과 선호하는 미래 질서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 주요내용

본 연구는 세계 질서 변화의 흐름과 미래 질서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2050년 미래 경제순위 10위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미국, 중국,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고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학자들이 함께 각자가 바라보는 미래질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학자들은 2050년 미래 세계질서를 전향함에 있어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구분하고, 각국과 대륙의 인식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세계 학자들의 미래 전망 결과 현재의 세계질서 변화가 가능성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발견하였고, 선호하는 미래를 위해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협력공간 모색, 중견국의 역할 등 다양한 시사점 들을 도출하였다. 국제정치에서의 미래 전망연구가 정확한 미래 예측 보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방안과 공간들을 모색하는 것이 갈등과 충돌의 미래가 아닌 협력적 미래로 나아가는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였다.

연구보고서
22-13

세계질서 변화와 주요국의 대전략-미래질서 전망과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에의 함의-

연구책임자 차정미

□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기존 가치규범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탈냉전 질서를 지탱해 왔던 패권도, 제도도, 가치도 모두 중대한 변화의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미래예측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과 함께 미래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데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들의 미래인식과 대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본 연구는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국제질서 변화를 추동하는 힘의 이동의 주요한 축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세력전이,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과 남북간 세력전이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러한 질서변환기에 대응하는 주요 강대국들의 대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래질서를 형성하는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대전략의 경쟁과 충돌 속에서 어떠한 미래질서가 부상할 수 있는 지를 전망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등 5개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대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 질서 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한 탈냉전 시대의 종언, 중국이 강조하는 백 년간 본 적 없는 세기의 대변화, 독일 외교안보정책의 “시대적 전환”(Zeitenwende) 등에서 보듯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전환적 질서 이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종합적·전면적 전략을 구상해 가고 있는 점에서 한국 또한 중장기적 관점의 대전략을 모색하고 핵심과제들을 토론해 가야 한다. 강대국 간,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간 균열과 진영화의 추세가 확대되는 질서 속에서, 협력과 조화의 공간을 만들고 주도해 가는 ‘매개적’, ‘중간자적’ 연계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미래 리더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갈 때이다.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연구책임자 김태경

□ 연구배경 및 목적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의 한반도로부터 15-30년 후, 우리는 공동번영하는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갈등과 격차가 늘어난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구적 평화구축, 통합의 미래는 어떻게 가능할까. 본 연구는 중장기 관점(2022-2037년)의 한반도 미래전략으로서 평화의 제도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미래전략은 30년 후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미래전망, 15년 후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미래세대(청년세대)의 미래선호 조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호미래' 실현에 기여하는 전략이자 주민들이 최악의 선택지로서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미래'를 막는 규범적 미래목표를 위한 전략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장기적 미래지평에서 '한반도'를 하나의 통합된 정치체로 상정한다. 남북한 두 개의 정치적 단위가 분단, 분립해온 한반도에서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상상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서 한반도를 구성하는 담론, 실천은 차이의 심화가 대립과 갈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중첩된 공동의 상위의 정체성을 허용하는 통합의 방식을 모색하는 의의가 있다. 평화구축·통합을 지향하는 미래전략으로서 본 연구의 연합적 거버넌스는 독립국가들인 구성단위의 공동이익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들의 결합체로서의 전통적 연합에 주민들의 공동이익과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는 개념, 즉 주권국가들의 결합체 더하기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의한다.

□ 주요내용

이러한 연합적 거버넌스의 설계와 운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로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다층적으로 발전되어온 유럽통합의 연합적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영역별로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연합적 거버넌스의 역사가 슈만 플랜이 제시된 195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영역별로 다른 통합의 순서와 속도, 범위로 진행된 '차별화된 통합'의 과정에 주목한다. 유럽연합 차원의 초국적 정책결정 권한이 증대하는 수직적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유럽 차원의 정책 적용에 참여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수평적 통합은 195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했으나 정책영역별로는 차별화된 통합의 시점과 수준을 보여왔고, 이러한 차별화된 통합의 원칙은 장기간에 걸친 유럽통합의 동력이자 위협으로 작용했다.

27개 회원국, 연계된 다른 레짐을 고려하면 이를 상회하는 다자가 참여하는 유럽연합의 '유일무이한'(sui

generis) 성격으로부터, 유럽통합의 역사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한반도 맥락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궁극적으로 연합적 거버넌스의 경로 진화를 위해 어떤 전제조건, 과정과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국가적 통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즉 높은 상호의존의 수준, 다양한 국가/초국가기구/이익단체 등 행위자들의 선호 수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정치적 정체성, 자율성에 대한 정치화의 조건을 형성하는 정책영역에서 통합이 심화, 확산된 경로에 주목해, 중장기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주요 정책영역별(안보, 법제도, 경험, 직통전화 및 공동연락사무소, SDGs, 보건, 복지, 교통, 해양, 접경, 기후변화, 언어, 블록체인)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는 남북한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동의 미래를 설계, 운영하는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우선 단기미래(2022-2027년)의 지평에서 군사적 긴장을 회피하는 최소한의 평화의 제도화, 즉 선안후경(先安後經)의 경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했다.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심화를 관리하는 선결조건을 달성한 이후에 어떻게 연합적 제도화와 공동체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정책영역별 경로, 영역간 연계와 관련해 중장기 전략과 단기 우선 목표를 제공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통합을 우선적으로 심화할 정책영역으로는 언어·문화 협력, 기후변화 공동대응, 접경협력을 제시했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언제든지 평화과정이 역진가능하고 적대,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에서 이러한 차별화된 통합 접근의 핵심은 공동 대응, 통합의 유인, 선호가 높은 영역들의 제도화를 실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상호인정 및 공동의 통합된 단위로 접근하는 공동체성, '한반도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서 핵심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특히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협의주의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두 개의 정치적 단위 간 연결과 이를 넘어서는 한반도적 단위에 대한 정체성, 새로운 서사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중장기 미래의 한반도에서 국가 내 특수관계를 상징하는 '민족적 단위'든 국제적 성격을 갖는 '지역적 단위'든 하나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수의 멤버십을 사고할 수 있는가, 특정 정책영역에서라도 두 개의 정치적 단위만이 아니라 통합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이러한 미래상에 대한 미래질문을 던지고 미래선호를 제시하고 합의하는 지속적 과정은 민의가 대표되는 공론장인 국회가 관장해야 한다. 국회가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포함해 중장기 한반도의 전략적 방향,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담론장으로서 향후 한반도 미래대화를 축적하고 이끌어가는 이니셔티브를 가질 때, 한반도 시민들의 '선호미래'에 더 가까운 미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연구책임자 허종호

□ 연구배경 및 목적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이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 성장의 시대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행복이 양질의 삶,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하였다.

□ 주요내용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160여 개국 중 59위: World Happiness Report 2022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기관 설립 초기부터 노력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2022년 수행한 2차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로, 조사의 개요 및 2021년 기준 대한민국 8천 가구 대상 만15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부분, 정서 부분, 삶의 만족도, 사회심리적 변인, 일상재구성 문항, 코로나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의 수치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밝히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더불어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 자료가 되며,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에서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보고서
22-16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 - 3개년 트렌드 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허종호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예비조사부터 2022년 수행한 2차조사까지의 결과의 트렌드를 살펴본 분석 보고서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 안에서 한국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3개년 트렌드 보고서로 한국인의 행복은 어떠한 방향의 변화를 겪어 왔는지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 주요내용

전반적 행복감을 포함한 행복 관련 수치인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수준은 3개년 연속 하락하였다. 정서 부문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정서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3개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2020년 이후 3년간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민의 행복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었다가 최근에 사회경제적 규제 및 감염격리 해제 등이 진행되었으나 한국인이 느끼고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그림자는 쉽게 가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

연구책임자 박성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올해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미래 대화를 추진했다.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은 아직 소수지만 조만간 다수가 될 시민으로, 다가올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이다. 우리말로 창발적 시민으로 호명하고 이들을 찾아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하는 선호미래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 주요내용

본 연구는 강원도 DMZ 접경지역 주민, 대전과 세종시의 다문화 이주민 여성, 대구의 공연예술인,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 전남 광주의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제주도의 해녀 등 다양한 시민 120여명을 만나 미래대화를 나눴다. 또한 입양, 장애인, 빈곤, 가족 살처분,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사회활동가들도 만나 소수와 약자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연구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만났으며, 탈북 청년들과도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도 들어보았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다양한 시민들, 소수와 약자, 청년을 만나서 들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분석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졌고, 그 결과 '선호미래의 실현성을 높이는 과학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는 시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미래의 징조로 생각된 사진을 직접 찍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한 '미래사진전'도 공동개최했다.

□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지역주민, 소수약자,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풀뿌리시민공론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천착하는 지역정당의 창설을 막고 있는 정당법 개정과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국의 농촌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등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지역주민이 품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조건과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22-18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연구책임자 민보경

□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문제해결 수단을 탐색하는 중장기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도출된 미래사회 대응 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먼저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미래비전과 전략을 측정하는 지표를 발굴하였다. 바람직한 미래 비전으로 스마트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등 세 가지 모습을 도출하였다. 먼저, 스마트 성장 사회는 기술과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를 발전시켜 번영을 가져오는 사회로, 이를 위해 기술혁신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대응,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핵심 지표로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기술기반 창업 비중,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비율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살펴본 결과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지속가능한 안심사회는 인구, 기후, 기술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하더라도 혼란이 없으며 안전한 사회로 이를 위해 출산 및 사회환경 조성,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노인빈곤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해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맞춤형 학습 및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통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지표 분석 결과,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의 포용 정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 비교할 경우 포용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 비교 시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율, 노인빈곤율, 여성경제 활동참여율,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등 일부 지표는 국제 비교 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불평등 심화 등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

연구책임자 박성준

□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기술패권경쟁,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첨단기술 선점을 통해 공급망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성을 2020년 기준으로 HS 6단위 무역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한편,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2012~2020년까지 공급망 취약성의 연속성과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HS 품목 기준을 산업분류 기준과 연결하여 소부장 산업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역시 검토하였다.

한편, 주요 강대국은 경제안보 관련 입법 및 정책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중심으로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는 한편, 경쟁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입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정책과 공급망 재편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무역 품목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은 구조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된 반면, 일부 품목은 일시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되었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이를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와 관련있는 핵심 광물자원의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
22-20

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전략

연구책임자 박성준

□ 연구배경 및 목적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은 무역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점차 현실화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탄소누출을 방지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영역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요내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제도의 주요 사항과 관련 논의, 예상되는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받는 품목 및 산업의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모형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향상을 통해 제도가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후기술 분석에서는 먼저 기후변화에 기인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정책이 공급망 개편에 긴밀하게 연관되는 정책영역을 5개 범주(탄소국경조정, 에너지 안보, 친환경 화석연료, 금속·광물자원 안보, 기후변화 적응)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는 5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련 기술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특허출원 현황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유망 기술 분야를 정리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후기술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완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이 높은 5개 정책영역의 기술(특허) 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임대차 시장 중장기 전략

연구책임자 이선화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주거체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주택문제를 분석하였다. 공급체제와 점유체제, 이를 연계하는 매개고리를 통해 한국 주거체제의 특성과 구조, 역사적 진화과정을 분석한 후 현 주거체제 하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적 주택 공급 전략과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제안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적률 상향과 주택가격 상승에 기댄 공급모형은 미래 주거체제에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서비스 제공자들이 운영 단계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에 참여하고 수요자, 금융, 생산자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공급자금융 및 소비자금융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역시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을 통한 대안적 공급 모델이 관건이다.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은 공공 부문이 교차보조를 위한 영리사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 저리 할부 판매(지분적립 등)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주택의 사용자와 공급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전체 주택 지분을 공급자와 입주자가 5:5로 분담하는 것을 원형으로 삼은 후 입주자에게 잔여 지분 적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임대차시장을 통한 주거안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을 흡수하고 다양한 층위의 시장이 단일시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통제하에 있는 임대주택의 비중을 최소 10%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사유제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대도시 노후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상한 기준을 유연하게 수정하여 5%로 일률 적용하는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사업자 관리는 「민간임대주택법」이 법의 강제력과 구속력 측면에서 훨씬 강력하다. 장기매입임대 아파트를 포함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 주택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거급여는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와 통합적 설계가 요구된다. 주거급여는 예산과 수혜 계층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임대와의 중복 수급 문제, 자가거주 저소득층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보고서
22-22

조세 기능에 부합하는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발전방안

연구책임자 이선화

□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1주택자 지원 수단으로 전락하여 조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 기능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하위부문이 아닌 소득세 전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키는 보다 이상적인 양도소득세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발생 원천과 상관없이 동일 소득에 동일 세부담을 부과하는 소득세 기본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소득 개념에 따르면 소득은 원천과 상관없이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양도소득에 적용하면 양도소득은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매해 발생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발생 시점 과세는 실현 시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실현 시점이 달라져도 똑같은 납세 부담을 지므로 공평하다. 그러나 자산 평가의 어려움, 현금 흐름의 문제 등 정책의 수용성은 매우 낮다. 실현 시점 과세는 소득 결집 효과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주택 세제에서 이 문제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과 직결된다.

본 연구는 실현 시점 과세를 수용하면서도 헤이그-사이먼스 소득 개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결집 효과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택분 양도소득세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도소득과 다른 원천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실현된 양도소득을 자산의 보유기간에 동일하게 배정하고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기간에 발생한 추가 세 부담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액으로 결정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와 통합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연분연승제이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은 폐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은 주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달성한다. 셋째, 이연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상속 시점을 한도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상속 시 취득 가치를 같이 이전하거나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세 부담 시뮬레이션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 폐지의 세 부담 경감 효과는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고가 주택에 집중해서 발생하였다. 둘째, 비과세 혜택을 없앤 후에 현재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 부담과 종합소득과 합산한 연분연승을 통해 구한 세금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고소득 분위와 일부 중고소득 분위기를 제외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한 연분연승은 현재보다 세금 부담을 약간 완화한다. 셋째, 새로운 세제 개편안 도입시 산출세액의 증가가 바로 조세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도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대부분은 상속·증여 시점까지 과세이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
22-23

공공정책 의제의 지속과 변화

연구책임자 박현석

□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여당과 야당, 이해당사자 집단, 시민들의 여론 등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정책 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정책의제 중 장기간 지속된 갈등적인 정책 사례를 선정, 분석하여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정치교착, 이익집단 정치 등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언론 관련 법안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결과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교착 등 기존의 설명과 달리 정책 의제의 변화와 입법 성공 여부는 정당 간의 세력분포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관점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관점은 모두 강한 정당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정당규율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둘째,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의 정책선호는 정책 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이익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한다. 셋째,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하거나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게 된다.

□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기술

첫째, 제왕적 대통령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논쟁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가 대결적인 정치를 강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나 수적 우위를 토대로 하는 일방주의 정치가 항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입장이 정당을 통해 정치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연구책임자 민보경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 전략 및 사회 전반적 미래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실증적 자료 기반의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기술발달로 인한 불평등 심화,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소득격차와 양극화 심화 등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정책적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분배 지표,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비교적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적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건강 측면에서의 큰 진보이지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강수명, 미충족의료율, 1인당 보건의료 지출 등의 지표 분석 결과 예방과 치료의 통합,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포용도 변화, 다문화 수용성, 이주민 환대 지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 비교 시 포용도의 수준이 낮은 편이며, 통합 지수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도출한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중장기계획 평가와 연계하여 바람직한 미래사회상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비전-중장기계획-관련 사업으로 이어지는 국가차원의 미래대응 모니터링 방안을 도출하였다. 저출산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자녀돌봄 사회화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미래사회 대응 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등으로 관련 중장기계획을 연계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였다. 또 다른 사례연구로,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공간 집중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정책적 시사점

자녀돌봄 사회화 관련 중장기계획과 정책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었고 공식적 돌봄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돌봄의 사회화는 아직 부족한 편임을 확인하였다.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활용하여 균형발전 관련 중장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 지표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지방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유형별로 데이터를 살펴보고 지역에 적합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전환과 환경갈등 기획연구

연구책임자 김은아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녹색전환 성과를 비교하고, 녹색전환 과정을 방해하는 환경갈등 해결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주요 내용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녹색전환 성과를 비교하고, 환경갈등의 유형 및 갈등 해결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으며, 녹색전환 촉진 요소와 환경갈등 해소 시나리오를 연계한 녹색전환-환경갈등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녹색전환 여건 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녹색전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OECD 녹색성장 지표체계에 기반하여 ‘녹색전환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지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지표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의 녹색전환 현황과 방향성을 분석하였고,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환경·자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빠른 온난화 속도 및 대기질 악화 등 녹색전환에 반하는 방향성에도 기여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을 ① 규제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② 입지갈등, ③ 국제갈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는 ① 관련 국제/국내 정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② 협상 외 갈등 조정 방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③ 협상을 통하여 서면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환경갈등 사례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갈등 해결 시나리오를 연결하였다. 더 나아가 녹색전환-환경갈등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상호 연계가 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으며, 상기 분석내용에 기반하여 후속 기반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연구 틀을 제안하였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과거의 정부 주도 녹색전환 노력이 녹색전환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기존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녹색전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갈등 해결 시나리오 및 녹색전환-환경갈등 통합모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연구
보고서
22-02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연구책임자 김태경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를 여성의 관점에서 탐색, 준비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의 미래는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즉 한반도를 거주 공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에 영향력을 받으며 이러한 미래전망, 미래선호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때 실현에 가까워진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미래전망과 미래선호를 탐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직까지 여성의 참여, 대표가 제한적인 현재의 한반도 평화과정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여성-평화구축의 다양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젠더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해 평화,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젠더화된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평화,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안보, 평화 담론 및 실천이 갖는 젠더화된 성격, 즉 특정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일련의 태도, 가치, 규범 등 체계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조명했다. 연구자는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Peace·Security) 의제의 틀 하에서 서울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소주제, 즉 ❶ 여성과 일상의 안전, ❷ 여성과 일터/가정, ❸ 여성과 한반도 평화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선호를 조사했다.

□ 정책적 시사점

20~60대에 걸친 서울시 거주 여성들의 FGI(5그룹, 총 25명) 결과, 여성들은 개인 안전, 삶의 질, 평등, 공정 등 광범한 차원에서 평화를 정의하고 변화, 대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에게 한국은 더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점, 법제도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하는 일터(혹은 가정)에서의 젠더 간 불평등을 지적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인식과 미래의 평화, 통합을 위한 폭넓은 제안과 상상을 내놓았다. 본 연구의 일상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과 정의의 조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의식, 선호 결과는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평화가 여성의 인간안보, 기본권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응이 기존의 전통안보 관점의 ‘소극적 평화’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전환 시대의 지역발전 정책이슈

연구책임자 민보경

□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은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구의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은 거시적인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미래 인구변화의 적응적 관점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접근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먼저, 지속적인 저출생, 비혼의 증가 등의 시대적 흐름은 인구감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정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되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전략은 거점육성과 연결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에서 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을 하락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활인프라 중심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발전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은 수도권과 중앙정부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분권화, 주민참여, 다양화의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출생아 수, 인구유입 등 인구의 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지역발전 전략은 기존 사회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인구 규모의 유지 및 인구유입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변화를 고려한 효율적 공간전략 설계,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과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

기획연구
보고서
22-04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연구책임자 박성준

□ 연구배경 및 목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 금융제재,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등을 포함하며, 범위와 강도 면에서 기존의 경제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러시아 역시 이에 대응하여 천연가스를 통해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였고, 유럽은 이로 인해 에너지 대란을 겪어야 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함의를 간략하게 탐색하였다.

□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이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높은 천연가스 의존도를 이용해서 유럽을 압박하는 러시아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질서에 갖는 함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또는 신냉전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정 진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각국 또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국제금융시스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제재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안적 국제금융시스템 구축이 논의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 시스템을 분석하고 대안적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정책적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질서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관찰할 수 있는 국제전략 기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 역사, 현황, 과제

연구책임자 이상직

□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돌봄 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다. 가족도 국가도 아닌 제3의 돌봄 관계를 모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시설 중심의 돌봄 관계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을 주체로 한 '탈시설'의 요구와 실천은 기존의 시설 중심 사회복지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보고서는 그 질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탈시설 운동의 역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살펴보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탈시설 정책 현황을 검토하면서 확인한다.

□ 주요 내용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은 이제 주요한 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시설 의제는 한국사회에서 돌봄 관계가 조직되는 전제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흐름으로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향후 탈시설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천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험적인 탈시설 실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양쪽 입장 중간 어딘가에, 또는 양쪽 입장을 아우르는 제3의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은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제시되고 논의될 것이다. '시설에서 지역으로'라는 방향을 설정했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 민간이 운영하는 중대규모 시설 체제라는 한국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해외 사례와 같이 정부의 결단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단기간에 시설을 전환(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변화를 유도할 방안을 지금보다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설 전환 사례를 발굴하고 예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탈시설 지원 인력을 양성할 구체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획연구
보고서
22-06

정년제도의 정책과정-한국과 일본의 비교사례 분석

연구책임자 정혜윤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에서 2016(2017)년부터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제'의 정책과정을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도해, 정책위기를 <정치과정>의 문제로서 탐색한다. 한일 양국 정년제의 이익대표체계인 노사정협체와 정치대표체계인 국회 논의과정을 비교분석해, 고령사회 미래 대응을 위한 제도·시행의 방법론과 국회 차원의 시의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주요 내용

한일 양국의 현행 '60세정년제'의 고용 보호 수준과 기업규모별 시행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제도화 과정의 역사와 특징, 정치대표체계와 이익대표체계에서 정책과정, 정부 역할의 차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첫째, 일본 정년제는 제도화 과정이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사-공 회의체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렴되는 형태로 정책과정이 진행되었다. 반면 한국 정년제는 도입과 시행 속도가 일본에 비해 빠르고 논의과정도 불연속적이다. 노사합의 수준이 낮고 여야가 법조문 자체에 양자를 조정하는 조항을 명시했으나, 제도 자체를 강제하며 오히려 사업장 내 분쟁 요소가 되어왔다. 둘째, 일본보다 한국 정부의 정책영향력이 강하다. 일본 정부도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노사 간 정상교섭이 우선이다. 정부정책은 노-사 간 상호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를 운영해 제도의 수용 수준을 높이려 한다. 반면 한국은 노사정합의체는 운영부터 구성까지 노사교섭보다 정부 방향이 중요하고 국회 심의도 부처 영향력이 막강하다. 또한 한국정부도 고용연장 관련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재적 조정보다 외재적 강제자에 가깝다. 셋째, 상술한 양국 제도화과정의 차이는 구성원의 수용성과 시장에서 작동 수준의 차이와 연결된다.

□ 정책적 시사점

정부가 기업에는 '정년연장(계속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체계개편'을 강제하는 방식만으로 실제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효과는 크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성원이 충분히 수용하고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❶ 국회 차원 정년제도 영향 분석 및 평가로 노사 간 이견 조정 토대 마련 ❷ 장기적 노사정 논의(혹은 거버넌스구조) 마련 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정년정책의 연계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 전략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외교에의 함의-

연구책임자 차정미

□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기술과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서사(narrative)와 정체성에 기반한 연대그룹의 구축 또한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핵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 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권위주의 국가로 '타자화(othering)'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그룹의 형성과 결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차이의 강조는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호국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중국이 서구의 타자화와 디커플링 전략이 심화될수록 개발도상국을 그룹화하고 진영화하면서 중국 우호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중국이 미중 경쟁의 부상 속에서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화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 강화해 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를 서구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개되는 자기범주화와 동원전략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전략을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우리(us)와 내부그룹(in-group)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조망하고,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 논의를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우호그룹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 정책대안 및 시사점

서구의 대중 봉쇄와 견제가 강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스스로 개발도상대국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의 틀을 강조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간의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그룹의 형성과 결속 경쟁이 지속 강화될 수 있다. 미중 양국간의 상대그룹에 대한 부정과 자기그룹의 결속이라는 전략이 국제질서의 이원화와 진영화, 나아가 그러한 균열 구조에 기반한 북중관계의 그룹화와 결속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외교에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기획연구
보고서
22-08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미래인식 조사

연구책임자 박현석

□ 연구배경 및 목적

대통령 임기 5년을 넘어서 집권당이 교체되어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당과 야당의 생산적인 논쟁과 건설적인 협력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미래인식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기획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를 분석하여 초당적 합의의 여지가 있는 의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 주요 내용

양대 정당이 공통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시급히 다뤄야 할 미래 의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위 두 가지 미래의제에 더해 각각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 정책을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들의 경우 양대 정당이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정책과 자산 불평등을 다루는 부동산 정책은 양당의 정책 선호의 차이가 커서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이슈는 당파적인 선호의 대립이 강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정책이 결부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도 크다. 노동 양극화 해소 대책에 있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다소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기술

당파적 선호가 강하게 대립하는 복지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국회 내의 의석배분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이 교체되고 다수당이 바뀌면 정책 또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 양극화 해소 대책 등 당내에서 선호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타협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당 간의 협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2022년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1)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6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작성자 김유빈

이 보고서는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위원회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말 설치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연구진은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반목과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37호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작성자 이상직

이 보고서는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변화를 장애인 운동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20년 후의 한국사회 모습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운동의 영향이 장애 입법의 형태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둘의 관계를 주요 국면으로 구분해 서술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이 보고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짧게는 20년의, 길게는 40년의 장애 입법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고 실천되는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작성자 허종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020년도 6.83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집단인 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 수준, 불안정한 종사 지위,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처한 사람,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은 전년도 대비 행복 수준도 더 크게 감소하여 행복 불평등이 심화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행복 취약집단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근거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제39호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 아젠다 10선

작성자 김현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요한 교육아젠다 10선(① 교육 패러다임 전환, ② 교육비전 정립, ③ 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 ④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 ⑤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⑥ 교육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⑦ 개인맞춤형 교육, ⑧ 100세 교육제도, ⑨ 건강스포츠키교육, ⑩ 사회적 약자 교육)을 제시하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임을 강조했다.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작성자 박현석

이 보고서는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추적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발견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정착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나, 법인세율 결정과정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당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정당들이 공조를 통해 협력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수의 정당이 논쟁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작성자 이선화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경제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했다.

미국의 장기적 성장 정체를 설명하는 공급측 이론은 잠재산출이 경제의 기술적, 인구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잠재산출의 성장률 하락에 주목한 반면 서머스(L. Summers)는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정체가 총수요의 구조적 부족에 기인한다는 장기정체론을 제기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기초로 하여 통화정책 중심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컨센서스의 변화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 전환에 중요한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제42호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작성자 여영준

이 보고서는 급속한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기회, 위험요소, 그리고 기술변화와 경제 사회시스템간 괴리로 파생될 잠재적 문제점에 주목하며 전략적 미래예측 연구로서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환경변화 양상에 따른 중장기 경제사회적 영향을 산출하고, 디지털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정책적 환경이 기술변화 속도에 발맞춰 진화하지 않는다면, 디지털전환 시대 기술변화의 편향성에 의한 잠재적 부작용이 노동시장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악화 등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비전으로서 디지털전환 기술과 학습 간 경주(race) 속 직무(숙련) 공급과 수요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창조적 학습하는” 혁신체제 지향을 제안했다.

제43호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작성자 김은아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평가보고서 1-6에서 다룬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분석을 통하여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파급력이 높은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이 도출되었다.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의안의 제안이유와 법안 발의 주요 내용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주요 현행법을 분석했다.

모든 정책영역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아젠더를 제시했다.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작성자 박상훈

우리 국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 가운데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하지 않게 과용된 사례가 있다면, 단연 ‘국가’와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우리 국회의 정치 언어 사용 관행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자연스럽게 정부나 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시민 등 다원적 가치를 담은 정치언어가 늘어나고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가 의회정치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작성자 박성원

이 보고서는 ‘미래 전망은 무엇을 목표로 정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제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미래전망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실천의 과정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 전망에는 전망의 가치중심적 목표를 명시할 것, 예측방법론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 전망의 다양한 내용을 제시할 것, 그리고 전망의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안할 것 등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과 개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야별 미래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로 했으며 지금은 소수이지만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도 전망하고자 한다.

제46호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작성자 성문주

이 연구는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취업 및 재취업, 숙련 수준 향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평생학습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와 학습 결과의 축적, 노동시장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학습 결과를 획득할 때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이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숙련 수준 향상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의 체계성을 향상하며,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작성자 이채정

이 보고서는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정신건강, 신체건강, 실업)을 유형화하고 기존 불평등 요인(화폐적 빈곤, 물질적 곤궁)에 따라 위험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빈곤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위험과 결부되어 있으며, 직접적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곤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 경험이 촉발하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위기는 연쇄적·중첩적이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관점과 빈곤 경험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세분된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작성자 민보경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행복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공통적으로 생활 수준의 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안정에 대한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 40-50대 중년 1인 가구,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 차별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가족 제도를 보완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수행하도록 하며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성

작성자 이선화

본 연구는 복지 자본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경제시스템의 특이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체제 대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을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적 전략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재편, 사회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인적자본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50호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작성자 이상직

이 보고서는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로 확인한 한국인의 '자원분배기준' 인식을 분석해 '능력주의'의 의미를 검토했다.

'이상은 노력주의, 현실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애매한 성과 지향이 오늘날 한국인이 떠올리는 능력주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원분배기준으로서 '능력주의'의 명암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51호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작성자 정훈

탈석탄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전 세계 산업·경제 발전을 이끈 주요 에너지원으로 탈석탄 과정에서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2050년 탈석탄 목표를 제시한 상황으로,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조명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주요 갈등 이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석탄발전 중단 근거 법률 제정 및 발전사업자 보상 방안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작성자 유희수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최근까지 경험한 인구학적 요인들에서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확대되어 왔는지, 그리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세 가지로 ❶ 노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마련 ❷ 둘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검토 ❸ 근로생애 연장, 여성 및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적 투자 등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작성자 김유빈

이머징 이슈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전환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나 예측이 쉽지 않아 징후를 포착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에 전문가 의존적인 통찰 기반의 방법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대량의 데이터(논문)를 활용하여 이머징이슈의 정의에 부합하는 패턴을 알고리즘으로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신규성(novelty), 확장성(growth), 파급성(impact)을 지표로 하는 이머징 이슈 탐색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이머징 이슈 분석 연구자가 개발된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구현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최종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며 이머징 이슈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및 관련 사회적 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54호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작성자 박상훈

이 보고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제도적 기원, 한국적 변용, 민주적 성찰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정치의 좋은 역할 없이 좋은 개헌은 없다’는 태세를 입증하고자 한다.

대통령제는 87년 민주화의 결과이자, 한국의 정치문화로 자리를 잡은 정부 형태이기에 바꾸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바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보다, 대통령직의 수행 방법을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게 바뀌어나가는 정치적 개선 노력이 더 가치있으며, 그래야 개헌에 필요한 여론의 형성은 물론 정치적 합의도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다.

제55호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작성자 정혜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년제 도입과정의 특징과 효과를 탐색해 한국 제도를 재고했다. 한일 양국 조문이나 제도가 일견 유사해도 정책이 형성·조정·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고, 효과 차이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에서 법과 정책은 사회적 행위 조율을 돕는 내재적, 최종적 기능을 하는 반면 한국은 행위자들에게 외재적, 구속적이지만 규율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도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나 특정 법제도만 논의되면 쟁점이 협소해질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작성자 여영준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질리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적으로 전개되는 주요 사회변화 패턴을 조망하고, 시나리오 기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도래한 광범위한 충격에 대해 국가 혁신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정책이 고려해야 할 주안점을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를 특징짓는 주요 동인들에 대한 식별과 이들 동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 양상 및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했다. 더불어, 주요 접근 및 분석결과 바탕, 회복탄력적 혁신체제로 전환 위한 “3A(Anticipation(예측), Alliancing(네트워킹), Adaptation(적응))” 전략을 제시했다.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작성자 정훈

본 연구는 탈석탄 주요 갈등 이슈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설문 대상자는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선발하고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을 묻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해관계자 그룹별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을 통해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 여러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8호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작성자 민보경

최근 지방에서의 청년 유출은 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청년은 어느 지역으로, 왜 이동하는가에 대해 답을 구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전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시도 간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인구의 시도간 이동 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청년 인구이동은 비교적 활발하며 수도권 지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층의 주요 이동 사유는 '직업'과 '주택'이므로 본 연구는 지역 청년인구 전략으로 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지역 배치와 주거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59호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작성자 성문주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노동시장 입직 준비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학습지원에 관한 정책적 논의 및 지원이 필요하나 대학교육의 내용 및 과정의 변화 관련 논의에 비해 구체적인 교육 장면에서의 교육방법 변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인재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학습지원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 및 방안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강조되어야 할 학습패러다임, 학습유형 및 학습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개발한 '대학생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진단지표(안)'와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제전략 Foresight

제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작성자 차정미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는 단순히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저마다의 전략적 방향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미중기술패권경쟁이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 고민은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공유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세계의 인식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외교전략적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언했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로서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하며 의회는 한국이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8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작성자 박성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러한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중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 가능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글로벌 금융시스템 탐색 가능성,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상충 가능성,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심화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와 국제전략 기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작성자 김태경

이 보고서는 윤석열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약으로 제시된 ‘그린 데탕트’ 구상을 미래에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환경과 평화의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식, 그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보고서는 ‘그린 데탕트’의 성격과 관련된 평화구축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그린 데탕트’가 실현가능한 정책비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환경협력을 뜻하는 ‘그린’으로부터 냉전적 갈등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평화구축인 ‘데탕트’로 가는 과정에 어떤 이론적 개념들이 존재하고,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실현가능한 경로에 어떤 전제조건, 단계,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탐색했다.

제10호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작성자 박성준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변화, 첨단기술 관련 미국의 주요 입법사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재편 양상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공급망 안정성 점검,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상 확보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작성자 차정미

본 연구는 미중 양국간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과학기술외교 경쟁에 주목하고, 기술우위와 외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중 양국이 전개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외교 경쟁의 양상을 분석했다. 특히, 핵심신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을 위한 외교’와,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진영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요소를 활용하는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미중간 과학기술외교 경쟁을 분석하였고 한국의 과학기술외교는 국익을 세계의 열망과 필요에 연계시키고, 과학기술 환경과 외교적 목표를 연계하는 통합전략으로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작성자 김태경

이 보고서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함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역사적 갈등,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실천적 함의를 탐색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정체성, 재미동포여성들의 평화운동, 재영 탈북탈남민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 시야의 평화구축이 의미하는, 사람들 사이의 통합, 구조·문화적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제공했다.

제13호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작성자 김태경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중장기 미래는 근본적으로 남북한, 혹은 그 내부의 다층적 균열, 분단을 넘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한반도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적 거버넌스 구성은 연합적 제도화의 실현과 함께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제시하면서 유럽연합의 장기적, 점진적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차별화된 통합의 방법론을 제안했다. 차별화된 통합은 평화에 바탕한 협력과 공동이익, 공동정체성에 대한 수요(합의)가 높은 정책영역부터 접근함으로써 중장기 관점에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경로를 산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3) Futures Brief

제5호

과학기술의 미래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작성자 박성원

이 보고서는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European Parliament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EPTA)에서 2021년에 발행한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EPTA 네트워크는 25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회 산하 연구·정책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각국의 의회에 제안한다. 지난 2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 및 세계 주요국 의회는 다양화되고 다층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적절한 앱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과학기술 측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나노기술을 활용한 생명공학의 발전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EPTA는 상시적 위기의 때에 의회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6호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작성자 김은아

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환경분쟁 이슈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과거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하여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유해물질에의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동북아 국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국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문제해결을 넘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한 정보교류 활동 강화와 함께 협력 내용과 지역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7호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작성자 박성원, 김유빈

이머징 이슈는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책가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웠으나 트렌드로 급전환되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머징 이슈들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트렌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이슈를 도출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이슈의 식별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대량의 문헌을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걸러 이머징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를 이머징 이슈로 구성했다.

‘갈등(conflict)’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WoS(Web of Science) DB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이머징 이슈 검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신규성, 확장성, 파급성을 만족하는 상위 30개 키워드를 도출한 후 이들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헌 및 관련 문헌을 조사, 이머징 이슈를 구성했다. 그 결과, 정치, 사회, 경제, 환경, 국제 관점에서 최종 10대 이머징 이슈를 제시하고 미래 영향을 전망했다.

제8호

‘전례없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한 9대 이머징 이슈

작성자 박성원, 김유빈

본 연구는 WoS(Web of Science) DB에서 ‘전례 없는(unprecedented)’을 키워드로 넣고 최근 5년간의 영어 문헌을 검색하고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국제와 내부환경을 이루는 사회적 관계, 거주 환경, 기술에서 9대 이머징 이슈를 분석했다.

이슈의 분야간 연관성에 주목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가 이머징 이슈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부처 이머징 이슈 발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

작성자 박성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남북갈등, 불균형발전, 거주불안, 가족해체, 기술격차, 환경파괴 등 심화하는 사회적 문제를 몸소 경험하는 이머징 시티즌(창발적 시민)을 발굴하고 미래대화를 나누었다.

이머징 시티즌은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아내는 정부 정책, 외형에만 투자하고 문화자산은 축적하지 않는 정책,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지속적 갈등과 대안의 부재, 사회가 불안하면 소수와 약자부터 차별하는 문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적 돌봄의 약화, 미래세대와 미래환경을 파괴하는 정부 등을 사회적 문제로 지적했고 더 많은 시민이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현황

구분	호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6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김유빈	2022.01.10
	제37호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2022.01.24
	제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2022.02.07
	제39호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 아젠다 10선	김현곤	2022.02.21
	제40호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2022.03.07
	제41호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2022.03.21
	제42호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2022.04.04
	제43호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	2022.04.18
	제44호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	2022.05.02
	제45호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2022.05.16
	제46호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2022.05.30
	제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2022.06.13
	제48호	1인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2022.07.11
	제49호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2022.07.25
	제50호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2022.08.08
	제51호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2022.08.22
	제52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	2022.09.05
	제53호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2022.09.19
	제54호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2022.10.17
	제55호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2022.10.24
국제전략 Foresight	제56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2022.10.31
	제57호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예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2022.11.14
	제58호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2022.11.28
	제59호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안: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2022.12.12
국제전략 Foresight	제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예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비전	차정미	2022.02.14
	제8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2022.04.25

구분	호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국제전략 Foresight	제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2022.06.20
	제10호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박성준	2022.07.04
	제11호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Science Diplomacy)의 부상 - 한국 과학기술외교 전략과 과제	차정미	2022.08.16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김태경	2022.11.07
	제13호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김태경	2022.12.19
Futures Brief	제5호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박성원	2022.01.17
	제6호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김은아	2022.02.28
	제7호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박성원, 김유빈	2022.07.18
	제8호	‘전례 없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한 9대 이머징 이슈	박성원, 김유빈	2022.10.04
	제9호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 대화	박성원	2022.12.05

4. 2023년 연구사업 방향

(1) 연구사업 방향

□ 추진방향

- 국회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역량 집중
-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국제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도출된 아젠더 기반의 연구 추진
- 기관 주요 연구성과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책고객 대상으로 적시에 공유·확산하여 실제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미래문제해력 제고에 기여

□ 주요 추진사항

• 미래예측 및 분석

- 미래연의 대표적 보고서로서 매년 국회와 국민에게 미래전망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 제공
-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미래전망 및 전략 분석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미래전망 연구결과 제공

• 국가중장기발전전략

- 「미래비전 2037」 보고서에서 제시된 12대 아젠더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진이 협업하여 시너지가 창출되는 연구과제 추진
-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발굴·분석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내 미래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수시·단기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결과 적시 제공

• 미래연구데이터 구축

- 한국인의 행복연구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확산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2019년에 이어 대국민 선호미래상 조사 추진

• 연구 성과확산

- 국회·정부·국민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매체 다변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2) 연구과제 목록

부문	구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여영준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민보경
		국민 주거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택 부문 중장기전략	이선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노동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노동시장·노사관계법제도 결정 과정 및 효과 분석	정혜윤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박현석
		순환경제 국가 중장기 전략	김은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략 연구	정 훈
		중장기 국제전략과 의회외교	차정미
	국회 미래의제 지원	국회상임위원회 주요 미래의제 분석 연구	유희수
		국회 미래의제 수시 연구	유희수
연구기반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한국인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	허종호
		미래정책과 국민의 선호 연구	박성원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민보경
성과확산	성과확산	연구기획 및 지원	유희수
		연구 성과확산	김병수

국회미래연구원 주요 활동

1. 주요행사
2. 미래기고
3. 언론보도
4. 뉴스레터





1. 주요행사

국회미래연구원-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국회미래연구원,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MOU)을 맺고 “삶의질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 기탁식을 가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 및 2021년도에 생산된 “한국인의 행복조사”(예비조사) 데이터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사회과학도서관에 기탁하고 해당 데이터를 연구자와 국민에게 공개했다. 향후 세 기관은 행복조사 데이터 활용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행복연구 및 정책입안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I 일시 2022.01.18.

국회미래연구원-유엔 정무평화구축국 (UN DPPA) 간 협업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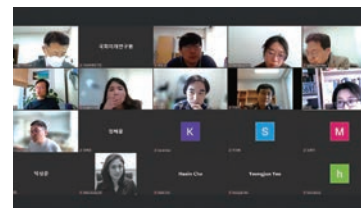
국회미래연구원과 UN 정무평화구축국(UN 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UN DPPA)이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UN 정무평화구축국 혁신연구원은 ‘동북아시아 미래평화’ 프로젝트(Futuring Peace in Northeast Asia)를 추진 중으로 미래연구원은 2021년부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업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연구협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글로벌 융합연구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사업과제 발굴 및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I 일시 2022.02.10.

2022년 연구과제 착수 보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박성원 연구위원의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를 시작으로 김유빈 연구위원의 국가중장기아젠다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등 13개 연구과제별 주요 내용을 각 연구진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I 일시 2022.02.22.

국회미래연구원·국회방송 특별대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국회방송과 공동기획한 ‘특별대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가 2월 25일에 방영됐다. 이번 특별대담회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발간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 추진 배경, 새로운 비전과 미래 핵심 아젠더 제안 과정 및 결과 등 보고서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Ⅰ 일시 2022.02.25.

국회미래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분권, 지방행정혁신 및 기타 지역발전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학술 정보, 출판물을 포함한 정보자료 DB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미나, 포럼, 토론회와 같은 공동학술행사를 함께 기획, 개최할 예정이다.



Ⅰ 일시 2022.03.21.

제4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국제정치학회,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을 주제로 제4회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유수의 학자들이 모여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을 모색했다.



Ⅰ 일시 2022.03.31.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 개최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이 공동기획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대국민 보고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Ⅰ 일시 2022.04.05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립목적인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추천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연구원 중장기 연구방향 설정, 연구계획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I 일시 2022.04.06.

개원 4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원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내부 행사로 진행된 개원 4주년 기념식에는 박명광 이사장,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원 포상을 시행했으며 박명광 이사장은 미래연구원이 지난 4년 동안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적이었음을 치하하고, 향후 입법부의 연구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연구성과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I 일시 2022.05.19.

국회미래연구원·국회도서관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과 아젠다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면 데이터 수집과 분석 나아가 효과분석과 미래전망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아 중장기 국가의 방향과 기준을 의회가 선도하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I 일시 2022.05.23.

제5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제5회 국회미래포럼은 '순환경제와 미래산업'을 주제로 이학영의원실, 박대출의원실,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공동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의 시기에 제한된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과 중장기 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I 일시 2022.06.09.

청년미래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크리에이터에 이어 청년미래위원회를 기획하였다. 청년들이 미래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대식은 미래연구원 소개, 환영사, 청년미래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 미래비전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I 일시 2022.06.28.

2022년도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도 연구과제 진행현황을 공유 및 점검하고, 양질의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고,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I 일시 2022.07.05.

제4회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제4차 미래전략 컨퍼런스-동아시아 경제질서 재편과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이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환영사를 시작으로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컨퍼런스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대응전략', '동아시아 혁신생태계 강화와 협업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I 일시 2022.09.07.

“Asia Pacific Futures Network 온라인 컨퍼런스”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 정책 입안자, 미래 학자 등과 함께하는 “Asia Pacific Futures Network8”을 공동 주최하였다. 9월 28일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김태경 부연구위원이 기조 연설을, 박성원 연구위원과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진행하였다.



I 일시 2022.09.28.

제6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2040청년다방·국민통합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을 주제로 제6회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청년이슈 중 청년문제의 본질적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청년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I 일시 2022.09.29.

2022년도 연구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도 연구계획에 따른 성과 도출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계획을 공유하고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그 간의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고,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I 일시 2022.12.05.

청년미래위원회 수료식 개최

2022년 6월에 시작한 청년미래위원회는 6개월간 대한민국 미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협업해 활동하였으며 미래연구에 청년의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수료식에서는 연간 활동 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우수활동자 시상을 하였다.



I 일시 2022.12.09.

2. 미래기고

미래 예측과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정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제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 기고문의 형태로 소개하는 ‘미래칼럼’과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뉴시스와 공동기획을 통해 매주 게재하는 ‘미래생각’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수행하였다.

2022년에는 미래생각 총 52회, 미래칼럼 총 40회를 게재하였다.

2022년도 미래생각 현황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1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샷(moonshot)프로젝트	김유빈	2022.01.05
2	협력에서 지역의 미래를 보다	민보경	2022.01.12
3	데이터 중심의 근거기반 입법의 국회를 기대하며	허종호	2022.01.19
4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이채정	2022.01.26
5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정해진 미래와 재정개혁	이선화	2022.01.27
6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정 훈	2022.02.09
7	과도한 ‘물갈이 영입 공천’이 민주 정치를 어렵게 한다	박상훈	2022.02.16
8	평생학습과 연계된 보편적인 경력개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때	성문주	2022.02.23
9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경제안보	박성준	2022.03.02
10	미래의 환경정책	김은아	2022.03.08
11	지역소멸 문제대응을 위한 미래 지역혁신정책	여영준	2022.03.16
12	여야 협치가 ‘국민’통합인가?	박현석	2022.03.23
13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 I : 국민과 노동자의 탄생	이상직	2022.03.30
14	누구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	김태경	2022.04.06
15	중견국의 흥망성쇠와 과학기술외교	차정미	2022.04.13
16	2055년 국민연금 고갈... 미래세대 짐 나눠야 할 때	유희수	2022.04.19
17	기술과 노동을 생각하는 방식, 변화를 희망하며	정혜윤	2022.04.27
18	보상적 성장의 대가	박성원	2022.05.03
19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총력전	김유빈	2022.05.11
20	파친코와 이주민의 도시	민보경	2022.05.17
21	담배 1갑에 8000원 시대 열릴까	허종호	2022.05.24
22	원칙 있는 복지국가	이채정	2022.05.31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23	새 정부 복지사업... 중앙과 지방 간 전달체계 개혁 필요	이선화	2022.06.07
24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와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 훈	2022.06.14
25	팬덤 정치, 무엇이 왜 문제인가	박상훈	2022.06.21
26	누리호 성공, 기업이 정신 확산 계기 되기를	성문주	2022.06.28
27	스테이블코인의 관리·감독 방안 고민할 때	박성준	2022.07.05
28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김은아	2022.07.12
29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전과제	여영준	2022.07.20
30	새 정치가 좋은 정치일까?	박현석	2022.07.26
31	불안정한 가부장제의 그늘과 빛... 젠더 관계의 미래	이상직	2022.08.02
32	국경들을 넘는 다양한 정체성들의 미래대화	김태경	2022.08.09
33	지역주도 R&D 실현의 조건	김유빈	2022.08.16
3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기초연금은?	유희수	2022.08.23
35	민주주의에서 전문가 역할을 고민한다	정혜윤	2022.08.30
36	미래 예측을 방해하는 악당들	박성원	2022.09.07
37	경제안보의 미래는 안전한가	차정미	2022.09.14
38	노인과 청년의 조건	민보경	2022.09.20
39	국민 정신 건강 위한 심리 및 상담 진영 간의 통합법 필요	허종호	2022.09.27
40	복지 이중구조 해소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이선화	2022.10.04
41	신 무역장벽 대응 수단으로서의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정훈	2022.10.11
42	정치의 기초	박상훈	2022.10.18
43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워줄 수 있는 교육과 사회를 기대하며	성문주	2022.10.25
44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과 첨단기술 산업	박성준	2022.11.01
45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성과와 미래 과제	김은아	2022.11.08
46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회복탄력적 사회로의 전환전략	여영준	2022.11.16
47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박현석	2022.11.23
48	출산의 미래, 우리는 아이를 어떤 식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이상직	2022.11.30
49	한반도 평화의 미래와 여성	김태경	2022.12.07
50	미래전쟁과 Technopolar(기술일극) 질서의 부상	차정미	2022.12.14
5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	유희수	2022.12.20
52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하는 시민조직 존중이 그 출발점	정혜윤	2022.12.27

2022년도 미래칼럼 현황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1	대전환의 시대, 꿈을 꾸는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이광재(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22.01.12
2	메타버스 시대, 한류를 넘어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박진(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1.19
3	4차 산업혁명·기술혁신 시대의 시민 덕목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2022.01.26
4	대한민국 위기의 근저에는 정치의 위기가 있다	이태규(국민의당 국회의원)	2022.01.27
5	한국 경제의 신화적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과 미래 과제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2022.02.09
6	미래, 인간은 퇴장할 것인가	조정훈(시대전환 당대표)	2022.02.16
7	‘실패해도 괜찮아’ 지속 가능한 청년문화예술을 위해	유정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2.23
8	인구 절벽, 그 사이 심화되는 ‘지방 소멸’ 조속히 정책 컨센서스 이뤄야	김상훈(국민의힘 중앙위 수석부의장)	2022.03.02
9	간호법 제정은 미래를 위한 준비	최연숙(국민의당 국회의원)	2022.03.16
10	온기를 잃어버린 사회, 전환적 공정 담론이 필요하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3.23
11	여가부가 필요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꿈꾸며	김상희(국회부의장)	2022.04.06
12	국가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조해진(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4.13
13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2022.04.19
14	교육, 교육 그리고 교육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4.27
15	지속가능한 국정 미래설계 체계를 구축하자	이명수(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5.03
16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서 철도교통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2022.05.11
1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5.24
18	기후정의와 불평등 해소 위한 주4일제 사회혁신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2022.05.31
19	스타트업 정신에서 찾는 정치의 미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6.03
20	저출산·고령화 문제 직면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송언석(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6.09
21	교육불평등 시대 우리 아이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6.16
22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교가 결정한다	태영호(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6.23
23	소멸위기의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는?	김수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6.30
24	미래 청사진은 아이 울음소리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에서	서정숙(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7.07
25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 과제	홍정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7.14
26	과학기술강국으로의 길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7.21
27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상상공인	이동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7.29
28	국가의 밝은 미래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임병헌(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8.04
29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주도해야 할 4차산업혁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8.11
30	인구 감소와 공교육 보릿고개를 넘어서	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8.18
31	함께하는 우리 교육의 미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8.25
32	문화예술 강국에서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이용(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9.01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33	미래복합재난에 대한 진단과 대응	오영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9.08
34	규제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09.15
35	개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박영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9.22
36	나누면 더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11.17
37	대형참사 이후 감시체계·시스템 선진화 필요성	신현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12.01
38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징벌배상과 집단소송 확대	오기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12.15
39	청년이 미래다	지성호(국민의힘 국회의원)	2022.12.22
40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이 필수다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12.29

3. 언론보도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 언론홍보 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성과, 행사 등을 언론사와 공유했다. 이에 중앙일보, 한겨레 등 다양한 언론사가 연구원과의 협업 및 연구성과 활용을 통해 다수의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일보(2022.07.16.)



시사기획 창(2022.12.27.)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매체명	주요내용	보도일
YTN	2022년 이머징 이슈	2022.01.03
CPBC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 "기후변화 적응 위한 법안 마련해야"	2022.05.06
MBC	[뉴스외전 포커스] "미국,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기술 탈취 우려"	2022.05.18
세계일보	팬데믹에도 눈부신 성장... 정부 신뢰 높아지자 만족도 '업'	2022.07.16
동아경제	중년층부터 1인가구 행복도 낮아져	2022.08.08
한국경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끄는 '클래스101'	2022.09.01
뉴시스	[창사기획-인구절벽] ❶ 전문가들 "정부 인구대책 지지부진... '백화점식 나열' 피해야"	2022.10.15
경향신문	'탄소 가격'도 유가·환율처럼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지표로 대두	2022.11.27
경인일보	20대초 직업찾아 부천으로... 30대는 화성 주택 선호	2022.11.28
KBS	[시사기획 창]바겐세일 재팬	2022.12.27
한겨레	한국인 행복감, 모든 지표가 떨어졌다	2022.02.08
	길어도 짧아도 불행... 주 '40~52시간' 노동자가 가장 행복하다	2022.08.31
	[이창곤의 정담]용산의 힘에 멈춰선 '정책결정자 겸 정책집행감시자'	2022.12.19
	한국인 행복감 3년 내리 '날개 없는 하락'	2022.12.31

연구원의 연구성과, 기고문, 주요 소식 등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총 52통의 뉴스레터를 정책고객에게 발송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부록

1. 설립목적
2. 주요연혁
3. 조직 및 인원
4. 비전, 목표, 전략추진체계





1. 설립목적

□ 「국회미래연구원법」제1조(목적)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2. 주요연혁



2017

12.12 「국회미래연구원법」 공포

2018

01.10.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조동성) 구성
03.21. 초대 이사회(이사장: 김선옥) 구성
05.21. 국회운영위 초대원장(박진) 임명동의안 가결
05.28.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개최

2020

05.20. 국회운영위 제2대 원장(김현곤) 임명동의안 가결
05.27. 국회의장 제2대 원장 임명(임기시작일 '20.05.30)
11.27.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위촉식 개최
12.24. 제2대 이사회(이사장: 박명광) 위촉(임기시작일 '20.12.24)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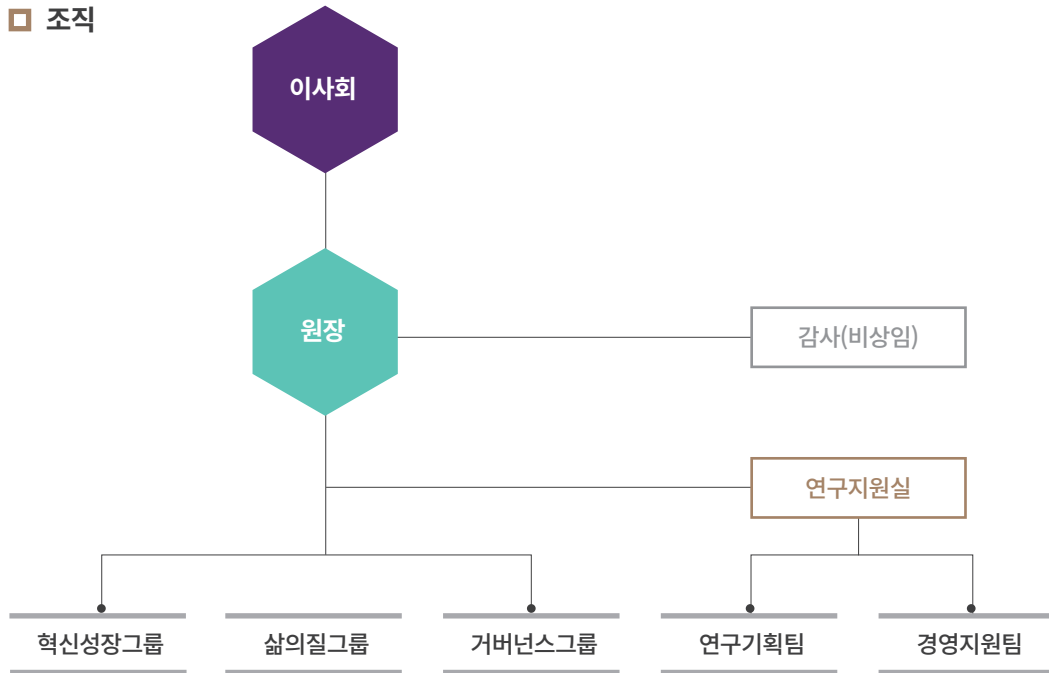
12.08.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전환」 보고서 발간

2022

01.08. 국회미래연구원-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한국사회과학 도서관 MOU 체결
04.05.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 개최
04.06. 국회상임(특별)위원회 추천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

3. 조직 및 인원

□ 조직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사업)에 연구 분야명사: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 인원

(단위: 명)

구분	원장	연구직	행정직	합계
정원	1	17	5	23
현원	1	16	4	21

※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 및 비정규직 제외, 2023년 5월 기준

4. 비전, 목표, 전략추진체계

□ 미션·비전·목표



□ 경영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

경영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1.1. 미래변화의 과학적예측·분석 및 국민참여형 국가미래상 제시	① 과학적 예측을 통한 미래 아젠더 발굴 강화 ② 바람직한 국가미래상 제시
	1.2. 국가미래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③ 핵심국가아젠더 중심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④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국가대응력 강화
2. 미래연구 플랫폼 역할 강화 및 정책활용도 제고	2.1. 미래연구 교류·협력 및 플랫폼 역할 강화	⑤ 국내 연구네트워크와 시너지 제고 ⑥ 글로벌 전문기관·전문가와 협력 강화
	2.2.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⑦ 국회·정부·국민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⑧ 매체 다변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와 확산
3. 조직역량 제고 및 경영체계 선진화	3.1. 인적역량 강화 및 조직역량 제고	⑨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기관 인재상 추구 ⑩ 인적규모 확대와 인적교류 플랫폼 활성화
	3.2. 연구활동체계 혁신 및 조직운영 시스템 선진화	⑪ 기관미션 중심의연구활동체계 혁신 ⑫ 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

2022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발간일 2023년 5월 30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6-2190
인 쇄 명문인쇄공사
TEL 02-2079-9200

ISSN 2951-0554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